

■ 문화수도 추진단 '도청 별관 철거' 입장 표명 배경



이병훈(가운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청 별관 철거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웅 문화전당 시설과장, 이 단장, 우규승 문화전당 설계자.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젠 대안 놓고 고민하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9일 기자회견에서 던진 핵심 메시지는 '도청 원형보존을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에게 '별관 철거 후 대안'을 놓고 고민하자는 것이다. 추진단이 공대위가 제시한 '별관 원형 보존과 설계변경', '시민여론 조사' 등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공대위는 "시민여론 조사, 전당 원형 보존을 전제로 한 자체 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혀 입장차를 보였다.

는 설계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씨는 "전당 설계안은 별관을 철거한다는 전제 하에 5·18에 대한 집단 기억 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별관을 존치한다면 그 자리에 들어설 예정인 전당 주 진입로의 역사적 상징성은 없어지고 만다"고 말했다.

우씨는 또 "문화전당 설계에서 특정 건물들을 따로 떼어내 보존할 경우 전체 조화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 별관건물의 경우 구조적 안전단점은 물론 측량 작업도 이뤄지지 않아 (존치할 경우) 설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5월의 대표적인 상징 공간인 옛 도청본관 건물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이 건물을 중심에 두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별관을 존치할 경우 전체 설계 개념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도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공대위 입장=공대위는 일단 "추진단이 공사 중단 선언을 하지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진단에서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가슴을 열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별관 보존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별도의 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추진단과 대화하겠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상징물 건립·철거 잔해 진열·보존 등 제시

공대위 "원형 보존 전제 설계안 마련엔 대화"

◇추진단 입장=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설계 변경과 관련, "전당 내부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한 부분이 변경될 경우 다른 영역까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공대위의 여론조사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단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됐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책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추진단·공대위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정책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추진단은 기자회견에서 ▲도청 별관 철거 잔해의 5·18기념 공원과 5·18묘역 진열·보존 ▲민주인권·평화 기념관에 축소 모형 전시 ▲별관 해체 장소 상징물 건립 등 대안을 상시시켰다.

추진단은 또 전당 조성공사가 차질이 빚어지면서 연쇄 공사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전당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데다 별관의 보존, 철거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공사 계획의 변경이 이뤄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사 추진은 어렵다는 것이다.

▲전당 설계자·설계 변경' 불가=전당 설계자 우규승씨는 도청별관을 존치시키

■ 전남도의회 도정 질의

“고흥 등 조선타운 착공 늦춰야”

내년 초로 예정된 신안·고흥조선타운의 착공식을 당분간 늦추고, 기존 조선업체의 위기극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석원 의원(무안·민주)은 9일 제237회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신안·고흥 조선타운에 투자하려 했던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기악화 등을 이유로 투자를 포기한 만큼,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 한 뒤 착공식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조선산업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며 “신안 조선타운의 경우 투자를 약속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 그리고 고흥조선타운의 경우 3개 투자협약업체 가운데 2개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막연히 조선타운을 조성만 하면 투자업체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착공을 했다가는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금은 기존 조선업체의 위기극복과 내실을 다지는 시기이지, 조선산업을 확장하는 시기는 아니며 기존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행정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에 대해 “신안·고흥조선타운의 경우 투자하려는 업체가 있는데도 굳이 조성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일단 조선타운을 만들어놓은 뒤 새로운 투자업체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동부권 발전 대책은”

2012여수박람회 이후 지역 성장전력과 광양만권 3개시 통합문제, 순천만 환경보존 대책 등 전남 동부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흥수 의원(순천1·민주)은 9일 제237회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여수박람회 기본계획안이 당초보다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여수시민만의 행사로 전락해 지역발전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동부권 발전전략에 대한 응역을 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또 “동부권의 주력산업인 철강·석유화학산업이 장기적으로 사양산업이라는 점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광양항 및 여수산단에 인접한 율촌산단과 신대지구의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순천~여수 간 도로망 확충과 순천·광양·여수 등 광양만권 3개시 통합에 대한 전남도의 공식입장 표명, 전남도청 제2청사 건립 등도 요청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에 대해 “여수박람회를 위해 전남 SOC 예산의 50%가 내년에 투입되고 내후년에는 70%가 투입될 예정”이라며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만권 3개시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와 협의한 적도 없으며, 도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힘든 문제”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정부 압력 불구 민주 반대 거세

국회 통과 쉽지 않을 듯

■ 지방발전특별법 어떻게 되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정장선 의원)가 9일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지방발전특별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경위 법안소위(위원장 노영민 의원)는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심의를 한 뒤 12일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지방발전특별법의 지경위 통과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지경위 소속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 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더욱이 한나라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반대할 뿐 아니라 법안소위 위원장이 노영민 의원으로 민주당 소속이고 더욱더 지경위원장도 정장선 의원으로 민주당 소속이어서 법안 통과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애초 이 법안의 상정 자체를 반대해오다가 한나라당 측에서 합의하지 않고는 통과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

고 상정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방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여당을 압박해온 청와대의 분위기를 볼 때 이 법안의 통과 무산은 확실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 차게 내세운 '5+2 광역경제권'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더욱 강하게 한나라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3일 지식경제위 공청회에서도 나타났다. 그동안 법안에 부정적이었던 한나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은 “지방발전특별법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주 의원은 “정부에서 이 법안의 통가를 위해 온갖 압력을 행사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법안의 처리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 발의

민주당 최인기 의원



민주당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이 한미 FTA와 극심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 신협 등에 부과하는 조합법인세의 저율과세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인, 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의 비과세 적용 시한도 3년 연장된다. 최인기 의원은 “경기 침체로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의 삶이 더욱 파헤쳐지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hospital building on the left. The main text in the center reads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용봉캠퍼스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starts anew at the Yungbeong Campus). Below this, it says '2008. 11. 17.' and lists various dental services. On the right, there is a map showing the location of the hospital. At the bottom, the tex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is written in English.